

#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

2015. 12. 4.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목 차

I. 그동안의 노력과 평가 .....	1
II. 추진 경과 .....	3
III. 개선방안 .....	4
1.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전환 .....	5
2. 국제수준과의 격차 해소 .....	7
3. 네거티브 방식 확대 .....	10
4.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합리화 .....	11
5. 규제 형평성 제고 .....	13
6. 신규 시장 창출 촉진 .....	15
IV. 현장 규제의 불편 해소 및 내부통제 등 강화 ...	17
V. 향후 일정 .....	19

## I. 그동안의 노력과 평가

■ '97년 경제위기 이후 영업행위 규제를 Positive에서 Negative로의 전환을 시작하였으며, 기능별·통합적 규제체계로의 전환도 병행

- ① Positive는 열거주의로 법령에서 허용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  
: 규정중심 규제(Rule-Based), 전업주의(Specialized Banking)와 연계
- ② Negative는 포괄주의로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것은 모두 허용  
: 원칙중심 규제(Principle-Based),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와 연계

### ① 업권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겸영업무 허용

- '00년 금융지주 내 은행, 증권·보험업 허용 등 금융지주제도 도입
- 방카슈랑스 등 펀드·보험 판매채널 확대
  - \* (펀드 판매) 은행/ (보험 판매) 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카드
- 업권간 겸영 허용
  - \* (은행) 투자자문업, 장외파생상품업무(통화·이자율) 등
  - \* (보험) 투자자문·투자일임업, 퇴직연금사업, 신탁업 등
  - \* (증권) 개인지급결제, 신탁업, IB 대출 등
- '14년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 해외법인 현지법상 업무 허용

### ②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 규제체계 전환

- '07년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열거주의 폐지(자본시장법 제정)
- 부수업무 포괄적 허용 : 증권('07), 은행·보험('10), 여전업('15)

### ③ '07년 자본시장법을 시작으로 기능별 규제체계 도입

- 자본시장법('07), 지배구조법('15), 금융소비자보호법(국회심의중)

■ 법령은 상당수 Negative로 전환되었고, 겸업 가능 업무도 증가하고 있으나, Negative의 완벽한 구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Positive와 Negative 규제체계는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규제 스펙트럼 선상에서 가중치에 따라 규제강도가 달라짐

□ 우리 법체계는 은행·증권·보험 등 전업주의에 기초하여 전면적 유니버설 뱅킹 및 네거티브 전환에는 한계

□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분야 등은 포지티브 규제를 유지하고 있고, 금융사고 발생시 규제 강화 \* 예: 금융지주법 → 정보공유 제한

□ 전업주의의 근간은 유지하되 겸영업무를 지속 확대하는 등 향후 규제·감독의 방식을 최대한 "Negative 철학"에 맞게 개선

○ 금융상품 제조는 고유업무(core)로서 전업주의(독점)를 유지하고, 판매·자문 부문은 겸업을 더욱 확대(cross-over)

○ 규제의 Negative화와 함께 금융회사의 준법,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병행

- \* 준법감시인 역할 강화 등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방안」 마련(8.13)
- \*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규제 강화(12월 예정)

■ 현장에서는 허용 가능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에 대한 신속·명확한 해석 등 규제 집행방식을 더욱 중시

- i. 법령에서 허용되어 있으나 비명시적으로 불허하는 경우 등
- ii. 법령 요건만 맞으면 절차 없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사전 심사 관행
- iii. 신고·등록제를 사실상 사전 인가제로 운용
- iv. 부수업무를 건전성 훼손이라는 추상적인 잣대로 신고 수리 거부 등

□ Negative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당국의 인식·관행의 개선 추진

○ 법령상 등록 또는 신고업무를 사전 심사하여 인가제처럼 운영하는 관행 근절

○ 금융개혁 현장점검단 운영, No Action Letter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장의 불편과 애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 II. 추진 경과

- ①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6.15) 발표 이후, 금융규제 전체 유형화
- ② '15.6월부터 협회·연구원 중심 작업반이 규제합리화 기준에 따라 검토(Top-Down)하고, 현장점검반도 과제를 발굴(Bottom-Up)

### < 규제합리화 기준(7개) >

- ① 사전적 규제는 사후적 규제로 개선하고 사후책임을 강화
- ②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 ③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를 온라인 환경에 부합하도록 정비
- ④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⑤ 업권별·기능별로 규제수준을 맞추어 경쟁 촉진
- ⑥ 금융사고 등으로 일시적 강화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 ⑦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

- ③ 동시에 업권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제의 개선방안도 검토·발표

### < 업권별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주요내용 >

금융지주 (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진출 지원, 자회사 편입가능 업종 확대 → 투자 확대</li> <li>• 업무위탁·겸직 허용범위 확대 →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li> </ul>
은행 (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자율성 인정 → 금리, 수수료, 배당 등 자율 결정</li> <li>• 책임성 제고 → 준법감시인 지위 격상 등 내부통제 강화 유도</li> </ul>
증권 (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금융 강화 → 기업자금지원 확대</li> <li>• 적극 기관투자자(QIB) 시장* 확대</li> <li>* 적극 기관투자자간의 거래를 전제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가 완화되는 회사채 시장</li> </ul>
보험 (1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상품 출시 및 가격 자율성 제고</li> <li>• 자산운용 규제 : 사전·직접적 통제 → 사후·간접적 감독</li> </ul>
서민금융 (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밀착·서민중심 자금공급기능 강화 및 내실화</li> <li>• 타 업권에 비해 엄격한 영업 관련 규제 합리적으로 정비</li> </ul>

➡ 총 1,064건 규제 중 영업행위 규제 521건을 선정·검토한 결과 192건의 개선제안이 있었고 이중 138건 개선(업권별 방안 등 79건 포함)

## III. 개선방안

### 금융회사의 영업 자율성 제고 → 경쟁 혁신 촉진

핵심 과제	세부 과제
① 사전규제 → 사후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경영·부수업무 사전신고 의무 폐지</li> <li>② 자산운용 규제 : 사전제한·직접 → 사후점검·간접</li> <li>③ 보험상품 심사부담 해소 : 사후보고 원칙</li> </ul>
② 국제수준과의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금융회사 업무위탁 규제 선진화</li> <li>⑤ 외국 금융회사 영업여건 개선</li> <li>⑥ 기타 외국보다 과도한 규제 개선</li> </ul>
③ 네거티브 방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⑦ 금융지주 겸업 활성화</li> <li>⑧ 금융투자업 정보교류 차단 규제 네거티브화</li> <li>⑨ 금융투자업 열거주의 규제 완화</li> </ul>
④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⑩ 오프라인 → 온라인</li> <li>⑪ 저금리, 고령화에 따른 보험상품 자율성 확대</li> <li>⑫ 현 금융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규제 정비</li> </ul>
⑤ 영업규제 형평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⑬ 동일 기능·동일 규제</li> <li>⑭ 증권사의 경영실태평가 합리적 개선</li> </ul>
⑥ 신규 시장 창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⑮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li> <li>⑯ 금융지주회사의 신사업 진출 및 투자확대</li> <li>⑰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o Action Letter 활성화</li> <li>○ 준법감시, 내부통제 강화</li> <li>○ 그림자규제 근절</li> <li>○ 소비자보호, 시장질서 확립</li> </ul>	

## 1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전환

### ① 은행·보험·금융투자업 경영·부수업무 사전신고제 원칙 폐지 (각 업권 법률)

\* 부수업무는 고유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큰 업무  
(예: 은행의 금고업무)인 반면 경영업무는 고유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업무로 일반적으로 타 업권 업무(예 : 은행의 보험·펀드판매)

#### ① [경영업무] 타 금융법령에 따라 인가·등록을 받은 경영업무를 재차 신고하는 것은 중복규제 → 사전신고 폐지(은행, 보험)

\* (예)은행은 펀드 판매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등록을 받은 후, 은행법상 사전신고

#### ② [부수업무\*] 당초의 취지와 달리 사전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사후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

\* 타 법령상 등록·인가가 필요없는 경영업무 포함

- 단,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는 사전인가 대상으로 규정

구분	현행	개선
부수업무	신고 후 운영	사후보고
타 금융법령상 등록·인가 필요한 경영업무	타법 인가 + 신고 후 운영	타법 인가시 신고없이 운영

### ② 자산운용 규제를 “사전제한·직접 → 사후점검·간접”으로 전환

#### 보험

※ 보험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0.19), 보험업법

○ 외국환, 파생상품 및 동일법인 투자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등  
사전한도 규제를 원칙 폐지하고, 지급여력비율(RBC)로 통제

\* 동일법인 발행 채권 및 주식 소유한도를 총자산의 7%로 제한

- 단, 다른 회사 주식 소유 상한 등 금산분리 원칙 관련 규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등 대주주 관련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

#### 금융투자

※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10.14)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급보증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보증에  
따르는 위험은 영업순자산비율(NCR)로 관리(자본시장법 시행령)

\* 타 업권 및 일반증권사의 경우 지급보증 총량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

○ 증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제한 폐지(금투업규정)

- NCR 규제 등을 통해 사후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PF 대출 만기를 전면 폐지

○ 증권금융회사 사채발행한도\* 폐지(자본시장법)

\* 증권금융회사는 자본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20배 범위까지 사채발행 가능

### ③ 보험상품 심사부담 해소 : 사전신고·사후보고 → 사후보고

※ 보험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0.19), 보험업법

○ 사실상 인가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

- 방카슈랑스 판매 사전신고 의무 폐지

- 예외적으로 새로운 위험보장상품 등에 대해 기존 규제 유지

## 2 국제수준과의 격차 해소

◇ 외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선진 제도는 벤치마킹

### 1 금융회사 업무위탁 규제 선진화(전 업권 공통, 위탁규정 개정)

- (외국사례) 미국, 영국, EU 등 해외 주요국은 업무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업무위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업무위탁 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 및 효과적인 감독·검사 수행에 중점
- (국내적용)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국제수준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

#### 1 본질적 요소 위탁 : 전면 금지 → 일부 허용

- 현재 업무위탁은 원칙 허용이지만, 본질적 업무는 위탁 불가
- 본질적 업무 중 최종의사결정 등 핵심 사항 외에는 허용하되, 업무수탁은 법상 업무수행이 허용된 금융기관에 한함

#### 2 업무 수탁 : 사전보고·사후보고 → 사후보고만 규정

- 업무 수탁의 관리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므로 사전규제 불필요
- 제3자로부터의 업무 수탁 현황 파악을 위해 사후보고 규정

#### 3 재위탁 : 규정 없음 → 단순 사실행위 재위탁 허용

- 재위탁 규정 불비로 사실상 재위탁이 금지되고 있었던 만큼, 위탁한 자의 동의를 얻어 사실행위\*의 재위탁 허용(규정 신설)
- \* 고지서 등 발송 업무 / 보관업무(신탁업에 해당하는 보관업무 제외) / 조사분석 업무 / 법률검토 업무 / 회계관리 업무 / 문서 등 접수 업무 등

#### 4 후선업무(인사, 총무 및 경영지원)

: 규정 없음 → 후선업무 중 최종의사결정 사항만 위탁 금지

- 후선업무의 위탁 여부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후선업무의 최종적 의사결정\* 외에는 업무위탁 허용(규정 신설)

\* 인적·물적시설의 구축·유지를 위한 최종 의사결정에 관한 업무

## 2 외국 금융회사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 1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에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던 실명법상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의무 폐지 (유권해석)

- 외국 투자자의 국내증권 매매주문에 대한 체결 정보는 국내·외 증권사 간에 투자자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 인정하여 동의서 징구 의무를 폐지

\* 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 : 동일한 금융회사 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의 경우 명의자 동의서 불필요

### 2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신설 시 심사요건 중 “국제적 신인도” 여부를 탄력적으로 적용\* (유권해석 및 은행업 감독규정)

\* (현행) ①적격 외부신용평가등급(투자적격), ②자산규모(상당수준), ③해외지점수(상당수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국제적 신인도’가 인정된다고 판단  
→ (개선) 예금수신 업무계획이 없어 예금자보호 필요성이 낮은 경우 해외증시 상장 등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

### 3 국내 투자자 요청이 있거나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대동하는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 대면활동 허용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역외영업 가이드라인」 제정 예정

## 3 기타 외국보다 과도한 규제 개선

### 보험

### 1 외화표시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위험관리위원회 심의 의무 완화\*

\* 외화표시수익증권 투자 심의요건을 완화 (비조치의견서 및 감독규정)

### 2 위험요율 관련 규제 정비(보험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 보험회사 스스로 경험위험률 조정이 상시 가능하도록 허용
-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 $\pm 25\%$ ) 폐지
-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 자율화((현행)30%→(16년)50%→(17년) 폐지)

### 3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 범위를 정비((현행) $\pm 20\%$ → (16년) $\pm 30\%$ → (17년) 폐지) (보험업 감독규정)

※ 2, 3 : 보험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0.19)

## 금융투자

- ① 유사해외통화(FX마진) 거래에 있어 상대국에 신뢰할만한 규제 장치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거래대상 국가를 확대  
\* 현재 일본, 미국만 거래 가능 (자본시장법 시행령)
- ② 해외 비상장 펀드에 투자하는 증권펀드 기준가격 재공고·재게시 오차범위를 확대(1천분의 1 → 1천분의 3) (자본시장법 시행령)
- ③ 파생상품 영업관리자 지정 자율화(금투업규정)
  - 기존의 파생상품 영업 관리자 업무를 지점의 **다른 관리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파생상품 영업 관리자 선임은 **자율화**
- ④ 계좌 순재산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용거래 금지 규제 폐지  
\* 당초 레버리지 투자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 보증금율 규제, 담보 비율 규제 등으로 규제목적 달성 가능 (금투업규정)
- ⑤ 외국\*에 비해 과도한 수준인 전문투자자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  
\* 영국·EU : 금융자산 50만 유로(약 7억원) (자본시장법 시행령)

	종전	개선
개인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 연소득 1억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 총자산 10억원 이상
일반법인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 총자산 10억원 이상

- ⑥ 헤지펀드 영업행위 규제 완화
  - 헤지펀드 매니저\*의 헤지펀드 이외 영업은 금지되어 있으나, **타 간접투자기구 및 일임재산 운용** 허용(자본시장법)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 담당자
  - 헤지펀드에 대해 증권 이외의 담보를 이용한 신용공여가 가능하도록 프라임브로커의 **전담신용공여 범위**를 확대(자본시장법)  
\* (예) 헤지펀드가 일반상품(금, 은, 원자재)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일반상품을 담보로 프라임브로커가 매입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

## 3 네거티브 방식 확대

- ① 금융지주 겸업 활성화(금융지주법 시행령 등)  
※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6.22)

- ① 계열사 간 업무위탁\* 규제 대폭 완화하여 연계영업 지원  
\*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계약을 위한 신청 및 서류접수 업무, 환전 등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가적 금융서비스,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
- ② 겸직규제 합리화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겸직을 원칙 허용\***  
\* 심사, 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금융상품 판매업무,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업무 등
  - **미등기 임원**에 대해 등기임원과 동일하게 **폭넓은 겸직 허용**

- ② 금융투자업 정보교류 차단 규제 네거티브화(자본시장법령)

- 정보교류차단 관련 규제\*를 英·美 원칙중심 규제체제로 전환  
\* 사내 겸업을 하는 경우 또는 계열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정보 제공, 임직원 겸직,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을 금지
-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관리할 내부통제체계를 수립·집행하도록 원칙만 법령에 규정하고, 그 수단·방법은 자율
- 구체적 수단·방법은 외국 정보교류 차단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금융투자협회가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업계 제시
- 회사의 내부통제체계 또는 그 집행이 미흡한 경우 엄중 제재

- ③ 금융투자업 열거주의 규제 완화

- ① 증권사에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 허용(금투업규정)
- ② 우정사업본부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RP) 참여 허용\*(금투업규정)  
\* 자금중개회사의 중개 대상기관에 우정사업본부를 추가
- ③ 대고객 RP거래 대상증권에 일정요건\*을 갖춘 해외국채 추가  
\* 매출신고서가 면제되는 해외국채 기준 준용 등 (금투업규정)



#### 4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합리화

◇ 오프라인→온라인 기반 규제로의 전환, 저금리, 고령화 등에 따른 보험상품 설계 자율성 제고 등

##### ① 오프라인 → 온라인

###### 공통

- ① 실명확인 방식에 **다중장치를 통한 비대면 방식을 추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온라인 원스톱 거래**가 가능토록 개선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유권해석, 12.1)

\* (이중장치: 필수) ①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⑤ 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생체인증 등) 중 2가지 의무 적용  
\* (다중장치: 권고) ⑥ 타기관 확인결과 활용(핸드폰인증 등), ⑦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⑦ 중 추가확인 권고

- ②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 (신용정보법)

###### 금융투자

- 금융투자업자가 **비금융투자업자에게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에 대한 예외 마련  
→ 핀테크 추진 관련 IT 기업 등에 대해 적용 배제(금투업규정)

###### 보험

※ 보험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0.19)

- ① 온라인 환경에서 가입단계별 절차를 통합\*하고, 여행자보험 등 간단한 보험의 경우 **대면가입 서류를 대폭 간소화\*\*** (보험업감독규정)  
\* 온라인 환경의 경우 상품권유단계, 계약체결단계 및 승낙단계의 구분 곤란  
\*\*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및 청약서를 통합한 1~2장의 통합안내자료로 같음  
② 보험업법령상 잔존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보험업법 시행령)  
\* 현재 온라인상의 보험가입, 설명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의 경우에 적용

###### 여전업

※ 현장점검반(유권해석)

- 여전법상 신용카드의 정의에 **모바일 카드를 포함**  
→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 가능

#### ② 저금리, 고령화 등에 따른 보험상품 자율성 제고

- ①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 및 수익성 가이드라인 준수 등 적정 마진 설정여부**에 대한 판단을 **심사기준에서 삭제**

→ **보험상품 수익성은 보험사 자율 판단**(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② 원칙적으로 금융당국이 직접 규율하는 **표준약관은 모두 폐지\***

\* 실손의료·자동차보험 등 표준화의 실익과 필요성이 큰 상품의 표준약관은 존치하되, 민간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보험업 감독규정)

- ③ 복잡하게 얽힌 상품개발 관련 **설계기준을 단순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상품규제**를 전면 **폐지**(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 **납입면제 설계 의무, 생존연금 5년 이상 보증지급 의무, 장해 등급별 보험금 설계기준 등 폐지**

#### ③ 현 금융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규제 정비

- ① **외은지점 설치**를 위한 원화자금(갑기금) 마련시 본점의 **외화자금 매각상대방**을 '한은'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은행'으로 확대**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 감독규정)

\* '66년 이래 외환관리 차원에서 외국은행의 외화매각 상대방을 한은으로 제한하였으나,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매각대상을 국내은행까지 확대

- ② **현행 은행 임직원 대출한도**(일반대출 2천만원 등)는 '98년 이후 동일한 수준이므로 이후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규제를 완화\***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대출금 산정 시 제외범위 확대(예: 주택담보대출 → 여타 담보부 대출)

- ③ **신기술금융시장이 투자 위주로 개편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폐지** (여신전문업법)

## 5 영업규제 형평성 제고

◇ “동일 기능-동일 규제” 등을 통해 공정경쟁 여건 마련

### ① 동일 기능-동일 규제

#### 금융투자

- 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 간 규제 차의 해소를 위해 부동산펀드 규제를 리츠수준으로 완화(자본시장법)
  - (최소투자비율) 최소투자비율 유예기간을 6개월→1년으로 연장
  - (금전차입) 자산 투자운용,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 상환 등 허용
  - (부동산 투자한도) 70% 초과 투자 허용
- ② 은행·보험 신탁업자와 달리 증권사 신탁업자의 경우 신탁재산을 대출\*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 \* 고유계정에 대한 자금 대여, 사모사채 인수, 신용대출, 금융기관 보증대출 등
  - 업무 성격이 신용공여보다는 신탁재산 운용 성격이 강한 경우 대출운용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검토(금투업규정)

#### 여전업

- ① 타 업권에 없는 대출잔액 제한규제를 일부 완화(여신전문업법)
  - \* 매 분기 ‘대출 잔액 ≤ 리스, 할부 등의 채권 잔액’ 규제를 운영중으로 대출보다는 할부금융 성격이 강한 오토론의 경우 대출 잔액 산정시 제외
- ② 은행업권과 동일하게 약관을 사후보고하는 사유로 “고객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를 포함(여신전문업법)
  - \* 현재 여전법 상에는 약관이 고객에게 유리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

#### 금융지주

※ 현장점검반,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A 금융지주 소속 은행에 금전 예치시 A 지주 소속 보험사는 여타 보험사와 달리 금융지주법에 따른 담보확보의무 발생
-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의 동일 금융지주 소속 은행 예치금의 경우 자회사간 신용공여 담보확보의무 대상에서 제외

#### 서민금융

※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9.10)

-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중 타 업권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 정비(상호금융 감독규정)
  - 실질적인 채무상환 위험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건전성 분류 시 과도하게 하향하도록 하는 분류기준\* 정비 예정
  - \* 감독규정상 예시 등을 통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
- 타 업권에 없는 규제(저축은행 개인 신용공여)이거나 지나치게 낮은 신용공여 한도(상호금융 동일인 대출한도)를 상황변화에 맞게 완화(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금융 감독규정)
  - 저축은행 개인 신용공여 한도 : 6 → 8억원
  - 상호금융 동일인 대출 한도 : 50 → 100억원(자기자본 기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조합에 한함), 5 → 7억원(자산 기준)

### ② 증권사의 경영실태평가 합리적 개선 ※ 현장점검반, 검사매뉴얼 개선

- 증권사는 자본적정성보다 수익성이 더 중요한 평가지표임에도 현재 증권사 경영실태평가 기준은 은행처럼 자본적정성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 → 수익성 중심으로 평가지표 개선



## 6 신규 시장 창출 촉진

### ◇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신사업 개척 촉진

#### ①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 금융지주

※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6.22)

##### ① 자회사등 간 해외법인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 면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다만, 위험관리를 위해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현행 유지
- \* 개별한도 : 신용공여하는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 합산한도는 20%

##### ② 금융지주의 해외법인 자금지원 수단 다양화(금융지주법 시행령)

- 대출 외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신용공여\*가 가능함을 명확화
- \*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 매입,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간접적 거래

##### ③ 해외법인 임직원 겸직 시의 사전승인제 폐지

→ 현지 감독당국 심사로 갈음(금융지주법 시행령)

##### ④ 금융지주그룹 회사형 공모펀드\*의 최소지분율 규제(상장 30%, 비상장 50%) 면제

\* (예) 자회사인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 등, 금융지주법 시행령

##### 은행

(은행법)

- 은행이 해외진출시 은행 또는 진출국가 등의 건전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발생하는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

\* 투자규모가 크지 않아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예: 자기자본의 1%)

#####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 해외진출 및 해외 투자 시 국내 SPC를 통한 투자 등 다양한 투자방식 허용하는 등 자회사 소유규제를 개선

#### ② 신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 확대 여건 마련

※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6.22)

##### ① 금융지주 자회사 편입가능 업종을 핀테크\*, 리츠 등 금융·실물 융합 업종으로 넓혀 규정화(금융지주법 시행령)

\* PG, VAN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회사, 자료처리·중계·전송 등 금융전산회사, 신용정보·Big Data·금융모바일앱·인터넷뱅킹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등

< 자회사 편입이 허용되는 특수목적 투자회사 >

근거 법률	투자기구	투자목적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취득·관리·개발, 처분 등
선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	선박의 취득, 대선 등
해외자원개발법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집합투자회사	엔지니어링 관련 사업투자
지능형로봇개발법	로봇투자회사	로봇 관련 사업 투자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집합투자회사	위치정보 생산·관리 등 투자

##### ② 실제 PEF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손자회사가 PEF를 소유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금융지주법)

\* (현행) 발행주식 총수 → 의결권 주식 총수

#### ③ 독립투자자문업자\*(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제도 도입

\* 전속 자문업자와 달리 상품공급업자 또는 상품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인 자문, 상품추천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

- (외국사례) 英·美 등은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소하고 자산관리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투자자문업 제도 도입\*

\* 영국 생명보험·연금시장에서 IFA 판매채널은 75.4%를 차지('11년)

- (도입방향) 영국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IFA가 전문성·신뢰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자본시장법)

## IV. 현장 규제의 불편 해소 및 내부통제 등 강화

### 1 금융현장의 규제 불편 해소 및 금융당국의 행태 변화

#### ① No Action Letter 활성화를 통한 현장의 모호함 해소

- ① 금융당국·협회 공동으로 비조치의견서 활용을 위한 설명자료 마련 및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실무자 대상 설명회 개최
- ② 비조치의견서의 해외 이용사례를 파악하고 한국적인 금융환경에서의 비조치의견서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 ③ 비조치의견의 회신내용이 공개 가능한 경우 업권내 모든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개선

#### ② 법령해석 사례 DB 구축·관리를 통한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 최근 5년간('10~'14년) 법령해석 사례(1,253건) 온라인 공개(8월)
- 주요 법령해석 사례를 업권별로 정리하여 "'15년 금융법령 해석 사례집" 배포 예정(12월)

#### ③ 현장점검반을 통한 규제개선 이행실태 점검 및 지속 보완

-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이용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영업행위 규제 개선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노력

#### ④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근절

- 행정지도, 감독행정에 대한 ①공문시행, ②절차준수, ③제재 금지 원칙 등을 통해 그림자규제에 대한 통제 강화
-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 등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으로 제도화하고, 옴부즈만 등 외부기관이 정기적으로 실태점검

### 2 내부통제 및 시장질서 유지·소비자 보호 병행

#### ① 준법감시인 역할 제고 등 내부통제 강화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방안, '15.8.13 발표)

- ① 준법감시인의 법상 지위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로 격상하고, 준법감시부서의 인력 확충 등을 유도
- ② 금융당국-준법감시인간 상시적인 상호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내부통제 워크숍 등을 통해 모범사례를 업계에 전파
- ③ 감독기관은 내부통제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및 작동을 중점 점검

#### ② 금전제재의 실효성 강화(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9.2 발표)

- ① 영업정지 같은 과징금 확대\* 및 기관경고 같은 과징금 신설  
\* 자본시장법, 여전법, 전금법, 회계사법(4개)→은행법, 지주법, 보험업법 등 추가
- ②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검토, 과징금 법정부과비율 약 3배 인상 등

#### ③ 소비자보호 규제 강화(소비자보호 규제개혁방안, 12월중 발표)

- ① 금융상품에 대한 당국의 즉시개입체계 등 사후규율 시스템 마련
- ②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 기록의무를 부여 및 불완전판매 유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수료 등 공시 확대 등

#### ④ 시장질서 규제 강화(시장질서 규제개혁방안, 12월중 발표)

- 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차단
- ② 공시 및 회계제도 정비를 통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유도
- ③ 지배구조 정보 공시, 주주 참여 등을 통해 회사와 투자자가 함께 공정한 지배구조를 구축해 갈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 V. 향후 일정

- 영업행위 규제개선과제 중 법률 하위규정은 '16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개정 사항은 '16년 중 국회 제출

\* 후속조치는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실시간 공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 규정	시행 세칙	기타	계
은행	7	3	2	1	-	13
보험	3	7	13	9	1	33
금융 투자	13	22	21	1	23	80
중소 금융	-	5	3	-	-	9
계	23	37	39	11	24	134